

쌀산업보전관련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대응과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는 등 쌀산업보전관련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쌀 협상 국회비준이 예정되어 있고 DDA 농업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농정의 근간이었던 각종 양정제도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한농연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의 개요와 쟁점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 농업계는 어떠한 대응활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된 쌀산업보전관련법 주요 개요

한국 농정의 상징이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시가매입과 시가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비축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또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가 실시되고 2004년산 추·하곡 수매가는 2003년산과 마찬가지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과 '쌀 소득보전기금법' 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한 후,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폐지, 즉 추곡수매제를 없애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600만섬 정도의 쌀을 상시 비축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양을 시장가격으로 매년 매입(300만섬 정도로 추산됨)한 뒤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또한 쌀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실시하되, 목표가격은 3년 단위로 변경하고 농림부장관이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회는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변경을 요구할 때 동의를 해주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이미 제시한 17만70원(쌀 80kg, 한가마 기준)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고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가 2007년 말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향후 3년간(2008~2010년)의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비율을 당초 정부안 80%보다 5% 상향 조정된 85%로 결정했다.

농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공공비축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재해 또는 국가 비상시 등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추곡수매제가 △농가소득 지지 △수확기 물량 흡수 △식량안보 등 3가지 기능을 해왔다면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3가지의 기능을 담당했던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추곡수매 때 500만섬 안팎이던 수매량이 300만섬으로 200만섬 정도 줄어들게 된다.

둘째, 정부가 비축물량을 확보할 때나 방출할 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시장가격이 적용된다. 이때 △시가를 도별 평균가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세분화해 시·군별 평균가격으로 할 것인가 △시장가격을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수매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간 수매 가격 차이는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정부매입이 시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파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농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농협, 농민과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많은 농가들은 수확기 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표가격의 국회동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쌀 가격이 하락해도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정을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설정된 목표가격(17만 70원)은 물가상승 및 생산비 단가 상승요인이 반영되지 않고 소득보전 비율도 85%로 정하고 있어 농가소득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3년 후에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는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기로 해 향후 목표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가?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 17만 70원이라는 목표가격은 쌀 협상 등 외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부에서는 목표가격을 17만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농가소득 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가격은 논농업직불제를 포함한 가격이고, 생산비단가 및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따라서, 물가상승(교육비 인상 등)으로 인한 지출은 많아지고, 생산비 단가(농자재 등)도 상승하여 수입은 적어지는데 목표가격은 이들 가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 농가소득은 하락할 우려가 높다

■ 급격한 쌀 가격 하락을 감안한다면 보전비율 85% 적정한 수준인가?

정부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보전비율을 85%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입개방에 따른 쌀 가격은 (10년뒤 12만원 예상:80kg기준)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즉,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농가들이 부담하는 15%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산지 쌀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보다 낮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하락분 더욱 커지기 때문에 지역간 소득 불균형이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다.

■ “3년후에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는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기로 한 독소조항은 문제점이 없는가?

이번 개정안에는 3년 후에 목표가격을 결정할 때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한 독소조항을 삽입하였다. 따라서 향후 목표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2001~2003년을 기준으로 설정된 17만 70원 수준이 가장 쌀 소득이 떨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 소득보전이라는 목표 자체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 시장 수매 참조 가격 기준은 무엇인가?

앞으로 시행하게 될 공공비축제는 시가수매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에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공공비축제를 할 경우 시가수매 참조 가격기준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없다. 즉, 참조가격을 농관원에서 조사한 가격으로 한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엄청

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RPC 수매 가격을 참조가격으로 한다면 지역 농협내에 혼선이 발생하고, 수매가격을 낮추려고 할 경우에는 지역농협과 농민의 대립까지 예상된다.

■ 지역간 수매가격 차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도별 수매를 할 경우 수매 가격이 낮게 잡힌 도는 엄청난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시·군별 수매를 해도 수매 가격이 낮게 잡힌 시·군 반발도 불 보듯 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은 품질에 비해 낮은 쌀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매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매 가격 차이는 지역간 소득불균형·위화감·형평성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 수매 물량 200만석 감소에 따른 대책은 있는가?

현재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를 통해 약 530만석을 수매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비축을 300만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나머지 200만석 물량은 농협 RPC에서 흡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RPC 여건상 수매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공공비축은 300만석으로 하고 농협 RPC에서 물량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200만석을 수매하지 못한 농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시달림 혼란을 겪게 되고, 장차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향후 대응활동과 올바른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쌀산업보전관련법 개정은 시장 개방이라는 우리 농업의 엄청난 외부충격을 완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목표가격제는 쌀값 하락에 대응한 농가소득 보전의 관점에서 정책 수준과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비축제도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도입되어야 하며, 우리 쌀 산업의 장기적 비전과 다양한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쌀 협상 국회 비준 이전에 실질적인 국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쌀 협상 국회 비준 이전에 쌀 협상 결과와 농정개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확보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 대책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국내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직불제 단가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만약 200만원으로 고정직불제 단가가 상승이 된다면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고

2014년 쌀 가격이 12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변동형 직불금은 8,00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WTO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걱정하는 제정도 농산물 수입 관세와 수입 쌀에 부과 될 판매부가세가 전액 농업계에 환원된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350만 농민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쌀 협상 국회비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국내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국내 쌀의 고품질화 및 생산비단가를 낮추고 혁신적인 쌀 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업은 10년간 119조 투융자 사업이 발표되고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 유예기간을 받았다. 따라서 350만 농민들에게는 앞으로의 10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쌀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이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쌀 생산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목표가격과의 차이 부분은 농가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생산비 절감 분야는 농민의 의지보다는 정부의 정책(각종 농자재값)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농자재값 인하를 통한 쌀 생산비 단가 인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주산지 쌀의 생산단지 조성, 생산 및 수확 후 관리지도 등 고품질 쌀 생산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쌀 판매 홈페이지 개설, 품종별 구분저장, 전문식당 지정 등 브랜드 차별화와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쌀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민간 유통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민의 자구 노력으로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민간 유통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계절진폭 등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나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간유통의 주체적인 RPC가 현재의 출혈경쟁을 극복하고 마케팅 능력이나 시장
장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농협의 지원이 필요하다.

■ 통일시대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전체 식량자급률:35% 이상, 사료용 제외 식량 자급률:60% 이상, 쌀 자급률:100% 이상)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여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실제로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말한
것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다. 만약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목표치를 법제화 한다면 적정
농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전·이용이 가능할 것이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공비축의 양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한 적정 농지와 식량생산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인위적인 구
구조정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구조조정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남은 재원으로 목표가
격을 상향조정하여 농민들에게 영농에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면 영농의지를 가진 농민들은 농지 구입 및 임
대를 통해 규모화도 촉진될 것이다. **한농연**

양곡관리법 및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에 따른 한농연 요구사항

첫째, 목표가격을 20만원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국내쌀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단개농자재 값 인하에 힘써야 한다!

셋째, 국내쌀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수입쌀 국내 둔갑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통일시대에 대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조속히 법제화 해야 한다!

